

경찰, 내년 1월까지 강통전세 등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무자본·갭투자 등 7대 중점 단속 유형 선정 “피해 크거나 공모 범죄는 구속수사 원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상현)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까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본부장하는 전담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경찰청은 전국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

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의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 건수는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지난해 187건(243명) 등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경찰청은 고강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토대로 ▲무자본·갭투자 ▲강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사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에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꾸려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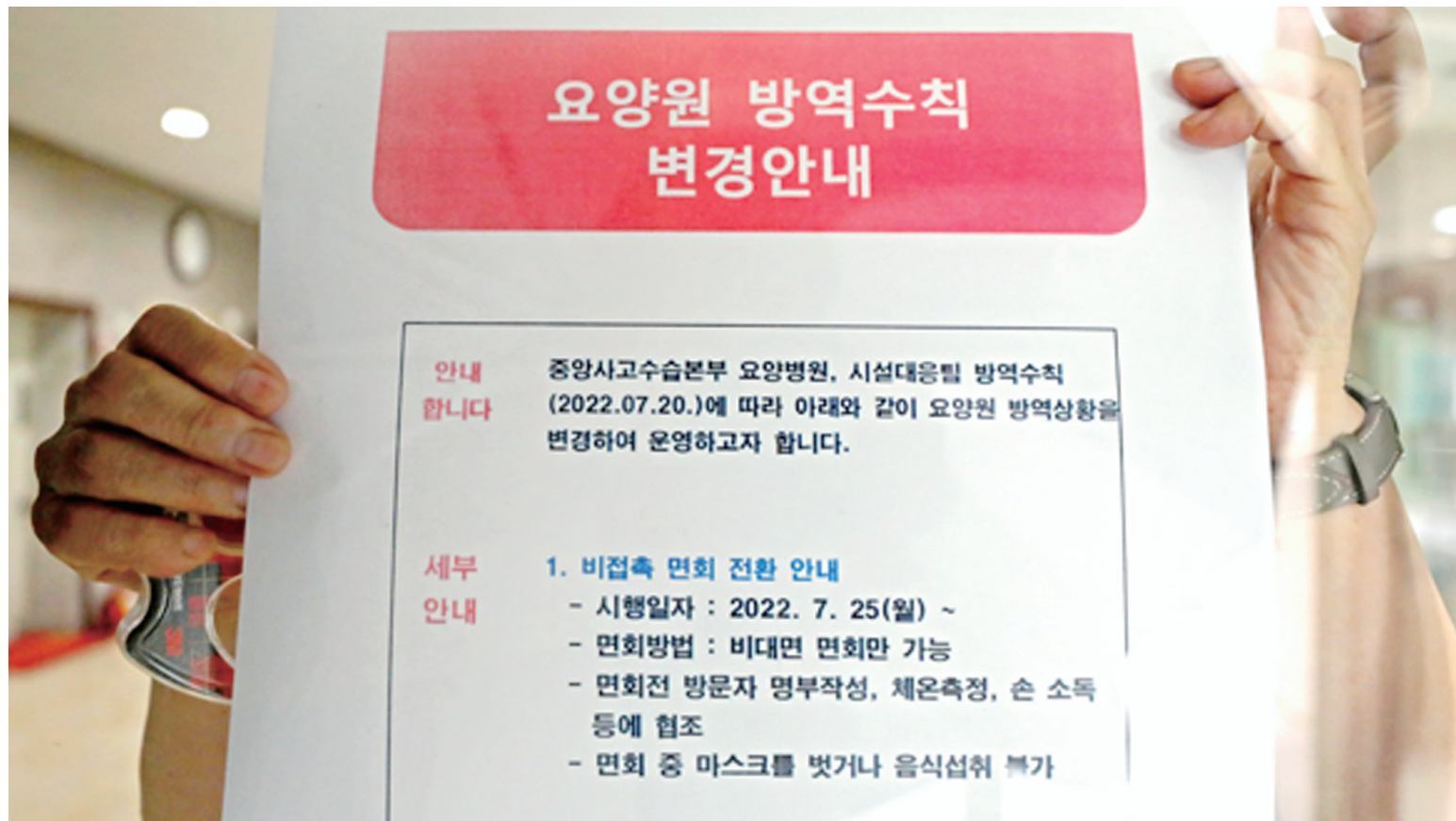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해 수사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 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도 집

중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 단속하라”고 밝힌 바 있다.

최이슬기자



비접촉·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서 비접촉 면회 전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대책으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대면 면회를 중단한다.

‘XX놈아’ 부하 면박주고 쌍욕 퍼붓은 영업부장 벌금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상습적인 모욕과 함께 부하 직원을 면박준 모 회사 영업부장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회사 영업부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부터 6월 21일 사이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20대 대리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 B씨를 3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작성한 월별·경비 정산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XX 놈아, 내가 처음으로 시킨 일을 요파위로 해왔냐, 개새끼야, 똑바로 안 하나냐” 등의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또 자신이 질문한 내용을 B씨가 잘

모른다고 답변하자 “그것도 모르냐며 심한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는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직까지 결심했다. 하지만, A씨는 경력적인 B씨의 업무 처리가 미숙해 두려하는 차원의 발언을 했다며 단순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 A씨의 죄질, B씨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교통사고 가장한 보험사기 벌인 일당 92명 검거

심야 시간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된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사고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9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년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는 등 총 87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당은 사고 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빌린 뒤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특히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과실이 더 많은 진로 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이후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을 접수해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는 등 보험사의 의심을 장기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배달원이나 동네 선후배, 지인들을 차량 탑승자로 모집해 함께 범행을 벌였다.

대부분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었던 공범들은 “차량에 타고만 있으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은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고 한다.

특히 공범들은 보험금도 유희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서민경제 피해 근절 및 건전한 보험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는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구직 활동 및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20대 젊은 층이 보험사기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광주서 외국인 운전자 신호등 들이받고 숨져

4일 오전 1시 33분께 광주 광산구 한 중학교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우즈베키스탄 남성 A(33)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인도 위에 설치된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

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기자